

# 불나도 쥐꼬리 보상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걸돈다

가입점포 4.35%... 공제부금 7.5억  
보험료 10만원·사고 공제금 2천만원

예산당국 '정부지원 못해' 입장 강경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 마련 절실

'반쪽짜리'로 시작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상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가 222건이고 이에 따른 재산피해만 520억원 규모에 달하는 등 전통시장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상부상조 성격의 화재공제조차 가입이 미진한 모습이다.

특히 화재공제가 안착되기 전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당초 계획했던 수 십억원 규모의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에 난색을 표해 확보도 하지 못한 상태다.

2005년 당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민간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만 96억원 정도였던 점을 상기할 때 가입자가 늘고, 공제부금이 쌓여야 하는 초기 수 년간은 불안한 운영을 할 수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 및 피해규모〉

/자료=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분	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사망	부상	
2013년	40	-	2	193
2014년	45	1	1	944
2015년	42	-	4	894
2016년	64	-	6	47,921
2017년	31	-	1	2,113
합계	222	1	14	52,065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 예시〉

구분	가입금액	건물구조	공제료(원)
예시1	2천만원	A급	66,000
예시2	건물 : 1천만원 / 동산 : 1천만원	B급	101,500
예시3	6천만원	A급	198,000
예시4	건물 : 3천만원 / 동산 : 3천만원	B급	304,500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화재공제가 만에 하나 초대형 화재가 발생한다면 '강통 계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0일 이찬열 의원실과 중기부, 소진공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지금까지 가입 대상인 약 20만개 점포 가운데 4.35% 수준인 9100여 곳만 가입한 것으

로 집계됐다. 1년 5개월가량 모인 공제부금도 7억5000만원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화재공제는 1년 기준으로 적게는 6만6000원부터 많게는 10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건물구조급수 등급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단순화해 민간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전통시장 점포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0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도 향후 사고 발생시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자가 점포, B급 건물 기준)은 건물 1000만원, 동산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전부다.

실제 상인들이 입은 피해액보다 공제금이 터무니 없이 작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일반 보험사의 화재보험 상품 가입도 불가능할 경우 화재공제만 쳐다보기엔 부족한 금액일 수밖에 없다.

상인들과 상품 상담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공제상담사도 첫 해 인 지난해엔 17명이 고작이었다.

다만 소진공은 최근 추가 채용을 통해 상담사 인력을 31명까지 늘렸다. 여전히 부족한 건 마찬가지다.

화재공제가 지금은 1년씩 단기계약만 가능해 장기고객 확보도 중요한 숙제다.

소진공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기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상인들이 장기간 화재공제에 가입,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화재뿐 아니라 식중독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재공제가 안착하기 전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 마련도 큰 숙제다. 현재까지 모인 7억5000만원의 공제금은 화재 사건 하나로 순식간에 바닥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상호부조하는 공제 성격에 맞지 않아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예산당국의 강경한 입장이 문제다. 이는 지난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중기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107건, 부주의가 52건 등으로 노후화, 사용자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엔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민영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실은 지금의 화재공제가 위로금 성격에 머물고 있고 상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상인들이 20~30% 정도의 보험료만 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 모색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회용 비닐봉투 없애고 페트병 무색으로

###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2030년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 감축  
재활용률 기준 34%→70%로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하고, 재활용률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제품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각 순환 단계별 개선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제조·생산 단계부터 재활

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모든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 플라스틱 제품 등은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거 거부 논란이 벌어진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한다.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체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 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서는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감사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해 과대 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까지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 과대 포장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일회용 컵의 경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 매장 내 매그잔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우수 중견 70곳 청년 2000명 채용

중견기업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  
대졸신입 평균연봉 3200만원 ↑

국내 우수 중견기업 70여 곳이 올해 청년 2000여 명을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우수한 중견기업을 소개하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SETEC) 제1전시관에서 '중견기업 일자리 드림(Dream)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 등 중견기업 73개 회사와 대학생 등 청년 구직자 40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기업은 반도체·전자, 기계 등 제조업 분야 46개사와 서비스·유통, 소프트웨어(SW) 등 비제조업 분야 27개사로 이들은 올해 안으로 약 2000명(상반기 중 약 500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기업들은 평균 매출액 3600

억원 이상,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 3200만원 이상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잡매칭 시스템을 채용 모든 과정에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시범 적용된 인공지능 잡매칭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통합 역량검사 → 면접 → 기업-구직자 매칭'까지 채용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스펙보다는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10일부터 2주간 약 2700명이 온라인으로 통합 역량 검사와 면접을 사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날 400여 명의 구직자가 사전 매칭된 기업과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도 이날 개막식 참석에 앞서 청년 구직자를 직접 만나 격려하고 취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추경예산안 등 청년 실업을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소개했다. /세종=최신용기자

## 농식품부, 쌀 5만t 중동·아프리카에 원조

식량원조협약 가입 후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에 따른 쌀 5만톤 원조 출항 기념식을 10일 군산항 제5부두에서 가졌다.

쌀 5만톤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기아인구 약 100만 명에게 6개월 간 식량구호가 가능한 규모로 이번 원조용 쌀은 6월부터 8월까지 에멘(1만7000톤), 에티오피아(1만5000톤), 케냐(1만3000톤), 우간다(5000톤) 등 4개국에 지원될 예정이다. 원조규모로 보면 FAC 16개 회원국 중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이어 6번째에 달한다.

이번 첫 출항은 군산항에서 선적한 쌀 총 2만2000톤이며 출항 이후 6월 중 에멘 아덴(Aden) 항구에 1만2000톤이, 에티오피아 지부티(Djibouti) 항구에 1만톤이

전달된다. 이번 원조용 쌀은 지난 2016년에 생산돼 정부가 보관하던 쌀로 농식품부는 긴급구호 성격을 고려하고 장마철 도래 이전 출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공 및 국내 운송 등 선적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가공 및 선적 절차는 농식품부가, 해상운송 및 현지 배분은 세계식량계획(WFP)이 담당하고 있으며 원조 이후 배분 현황, 현지 반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FAC 가입에 따른 쌀 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는 동시에 식량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유일한 나라로 국가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